

발행호: 46호

ISSN 2671-4434

발행일: 2021.03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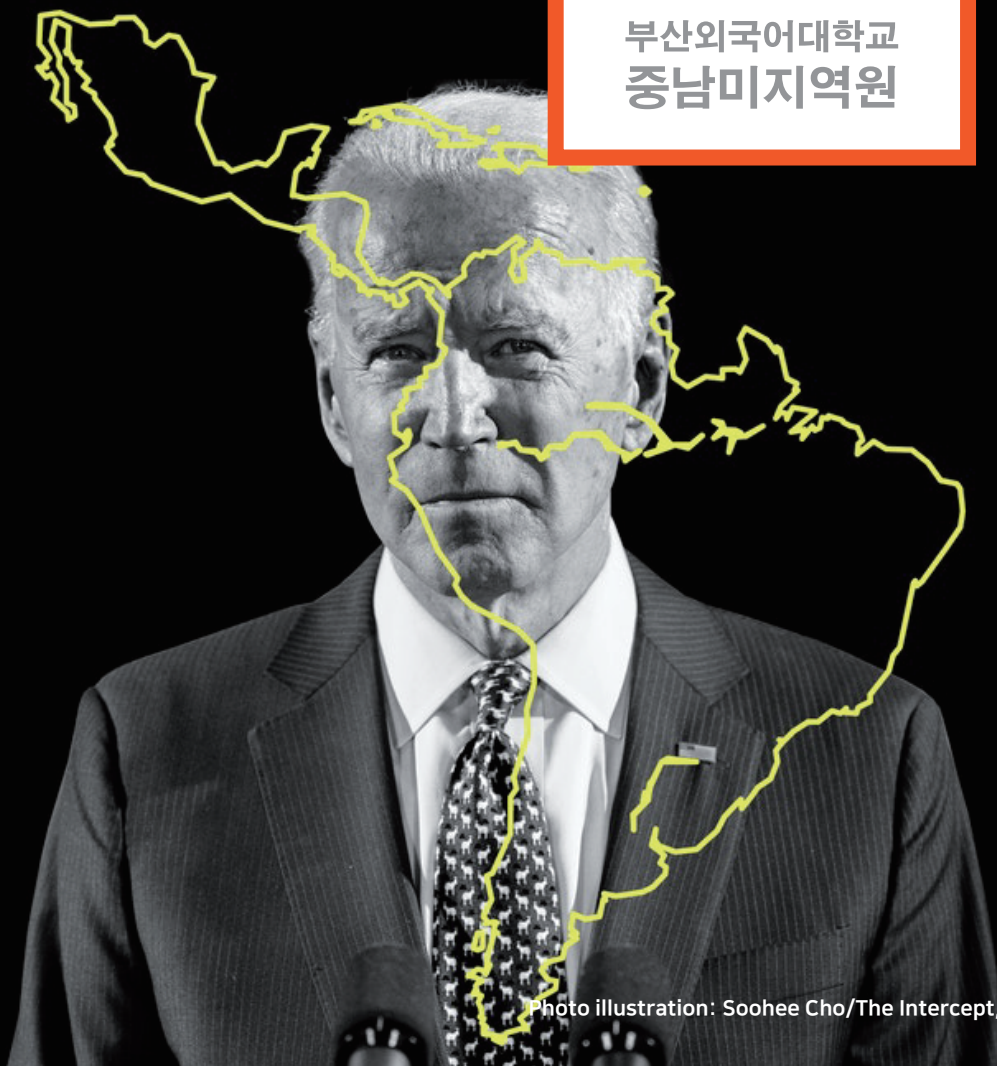


Photo illustration: Soohye Cho/The Intercept, Getty Images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1. ISSUE TALK

[00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통상정책 방향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LATIN AMERICA FOCUS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든 미 신임 행정부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별 관계 조망”

[013] 2.1. 바이든 시대의 미-중남미 관계 전망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027] 2.2.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과 브라질 외교지형의 영향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035] 2.3. 바이든 시대 미국-쿠바 관계변화 관찰 및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설치 가능성 시나리오 전망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055] 2.4.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역내 촉진자 칠레

임수진 (대가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3. LATIN AMERICA BOOK JOURNEY

[065] 두셀의 해방의 철학과 철학의 해방

박치완 (한국외대 철학과)

4. LATIN AMERICA VOICES

[083] 한국인의 정체성과 ‘멕시코연’

조상현 (멕시코 한인회 부이사)

[095] 코로나위기의 중미소국 파나마&코스타리카 - “같은 시작, 다른 끝”

이희중 (파나마 Rich&Noble corp. 수입유통회사)

5. ILAS 소식

[103] 간추린 소식



ISSUE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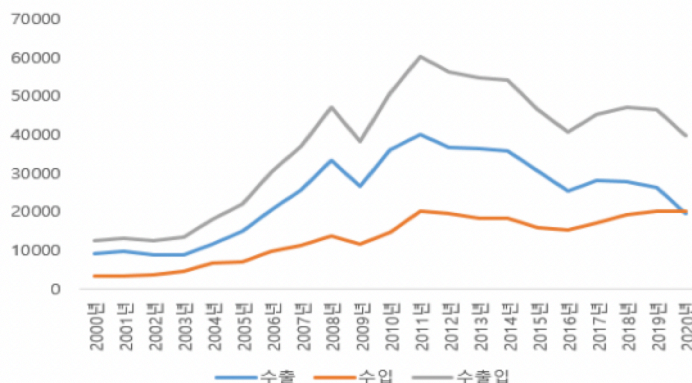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통상정책 방향

윤 여 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은 코로나 사태 훨씬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중미 5개국까지, 한국은 중남미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기점으로 교역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참고). 특히 최근 들어 수출의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코로나19,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상대적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와의 교역 부진 탈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통상정책이 맞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우리의 향후 대중남미 통상정책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입, 2000-2020

단위: 백만\$



출처: 한국무역협회

대중남미 통상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과의 조속한 협상 타결이다. MERCOSUR와 PA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¹ 현재 한국은 MERCOSUR와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협상이 타결 될 경우 한국에게는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다 향상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위해서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먼저 14년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對MERCOSUR 협상은 공산품과 농산품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MERCOSUR-EU 협상의 사례 처럼 협상 기간이 장기화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한-MERCOSUR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될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MERCOSUR 측은

1 남미공동시장으로도 지칭되는 MERCOSUR의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며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를 그 회원국으로 한다.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에 임함에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주요 부분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산업계의 반대와 다양한 통상환경 변수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 되거나 재차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브라질과 우루과이에서는 개별국 차원의 양자 간 FTA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TA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점검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택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상호 비준절차 이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례에서 협상 타결 이후 MERCOSUR 회원국의 협정 비준 기간은 장기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동향을 감안한다면 EU와의 협정 비준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상 타결 이후 MERCOSUR 각 회원국에서 신속한 비준을 이끌어내는 작업도 우리 정부가 협상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중시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PA 준회원 가입 협상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자.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PA 준회원국 가입은 실질적으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의미한다. 즉, 對PA 협상은 USMCA의 공급망 참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별개로 PA 준회원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인 싱가포르와 호주의 전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암튼, 때로는 이,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MERCOSUR 및 PA와 협상 타결이 외연적인 대중남미 교역 확대를 의미한다면 기존 FTA 체결국과의 교역 활성화, 즉 내연적 의미의 교역 확대 역시 중요하다. 특히 FTA 기체결국들인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과의 교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중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우리의 수출을 잠식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교역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개선 협상을 통해 협상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교역 및 경제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발효 10년이 다가오는 한-페루 FTA에 대한 개선협상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세계 교역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으며 앞으로도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미중 디커플링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게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교역

다변화이며 그 대상으로서 중남미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자소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 및 중남미 경제, 국제통상, 경제사 등이 있다. KIEP 연구보고서로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등이 있으며 연구논문이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Applied Economics Letters, 경제사학 등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 석사를 마치고 워릭(Warwick) 대학교에서 미국 경제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LATIN AMERICA **FOCUS**

바이든 시대의 미-중남미 관계 전망

김 원 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미-중남미관계의 추이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평소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 지역의 유대관계를 쇠망치로 부셨다”(Stuenkel 2021)고 비판했던 터라 새로운 대중남미 외교정책을 펼 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지역에서의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중남미 외교에서도 많은 현안에 있어서 예측불허의 일방적, 미국우선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당색과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바이든 행정부가 미주 역내 국가들에 대해 색다른 태도로 나오리라는 예측은 언제나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더 정확히 예측하려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처한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미-중남미관계의 추이를 해석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팬데믹과 사상 최악의 중남미지역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양측이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를 형성해갈 지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주지역의 국제관계는 크게 1980년대 이전과 그 이후로 대별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심각한 외채위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전 시대에 비해 미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중남미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의 금융 지원이 필요했고, 미국은 중남미시장의 개방을 원함으로써 중남미국가들은 정치 민주화 과정 속에서 경제적 대미 의존이 심화되어갔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남미지역에서는 그간의 경제개혁들이 초래한 실업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었고 마침내 중국경제의 부상,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함께 탈미노선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은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또는 ‘남미국가연합(UNASUR)’을 내세우며 중남미지역의 독자노선을 추구하였다. 마침내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미주지역에서는 물론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면서 국제관계는 이른바 G-2 또는 G-20 체제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역내 협력 모델을 구축해가던 중남미 지역국가들은 2011년 하반기 원자재 붐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또다시

경제 쇠퇴기에 빠져들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관리라는 당면과제에 각자 내몰렸다. 원자재 붐 시대에 확장된 재정 지출은 고스란히 각 정부의 정책부담으로 남겨졌고, 재정 운용에 실패한 대부분의 중남미 지도자들은 부패시비와 함께 재선실패, 탄핵 또는 사퇴 등 불명예스런 최후를 맞았다. 동시대의 버락 오바마 미행정부는 대내외적인 제약여건 하에서 대중남미 외교에 이렇다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만, 임기말에 단행한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그나마 역내 외교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집권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해소, 실업구제를 최대의 정책 목표로 내걸고 대외정책을 이에 맞추어갔다. 즉,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자유무역,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실리추구만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중남미의 국내 정치도 미국의 자기고립적 변화의 반사작용으로 변모함으로써 신임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을 옥죄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과 딜레마

즉,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대중남미 외교의 성패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외교적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정부와 달리 그간 민주당 정부들이 추구해온 전통적인 가치, 특히 민주주의, 인권, 반부패, 법의 지배, 환경보호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기술, 통화, 금융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형성하고자 하며, 팬데믹시대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에의 대처를 위해 국제 협력에 복귀한다는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외교는 당사국들의 대의명분이나 이해관계, 정책 방향이 일치할 때 협력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남미지역의 지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향후 미-중남미 협력을 이끌 수 있을지 조망해본다.

첫째, 미국의 대중남미 외교에서 제1 전선은 이론의 여지없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이다. 트럼프 행정부시대

미국의 대멕시코 정책은 무역 및 이민, 마약전쟁 부문에서 미국 일방주의로 일관되었다. 트럼프 집권 초기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PN) 정부는 이들 대부분의 쟁점에서 트럼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으나 결국 기존의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국내산업보호, 고용기회 회복 노선에 맞추어 새로운 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하는데 동의하였다. 2018년 12월 집권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멕시코 정부는 새 무역협정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비준 및 발효절차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AMLO 대통령은 트럼프정부의 대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및 중미 난민 유입 규제 정책과 관련해 대선 유세에서는 신랄한 비난을 가했지만, 정작 취임후에는 트럼프의 이민규제 및 무역보복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AMLO는 군을 동원해 중미 난민의 유입단속 및 추방을 하기 까지 이르렀는데 이에 대해 멕시코 ITAM대의 Denise Dresser (2021)는 AMLO가 트럼프와의 “실용주의적 동맹”을 맺었다고 평가한다. 즉, AMLO는 트럼프가 미국내 멕시코 인들을 자의적으로 추방하고, 중미인을 포함해 약 7만명의 미국망명 신청자들을 무기한 국경밖 멕시코로 내몰아 대기

하라고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트럼프는 멕시코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퇴보해가는데 눈감아 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는 미국당국이 살바도르 시엔푸에고스 전 멕시코 국방장관을 마약거래혐의로 힘들게 체포했는데도, AMLO가 인도를 요구하자 쉽게 넘겨주었고 멕시코가 그를 무혐의로 풀어주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1월 EPN정부가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인 호아킨 구스만을 미국에 범죄인인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취임에 즈음해 AMLO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고 있다. 오는 7월 실시되는 15개 주지사 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AMLO는 대미 정책이전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다. 즉, 2013년 에너지개혁법하에서 미국등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추진되어온 에너지산업 개방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가독점체제로의 회귀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USMCA 위반이기도 하다. 더불어 CIA, DEA, FBI 등 미국 수사요원들의 멕시코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미국, 멕시코, 중미국가들의 대마약전쟁 안보협정인 메리다협약(Merida Initiative)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미 정부기밀 폭로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줄리안 아산지에게 정치적 망명허용을 선언하는가 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을 멕시코로 초청하며 대미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이다.

둘째, 중남미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위상이 가장 높은 브라질은 언제나 미국에게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오바마 행정부시기(2009-2017)의 브라질은 룰라, 지우마 호세피 등 노동자당(PT) 출신 대통령 집권기(2003-2016)와 일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남미지역에 대해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달리 제반 정책이슈에서 유화적인 노선을 펼쳤지만 PT 정부는 남미지역내 지도국 역할을 자처했고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에서도 탈미노선을 추구했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남미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위기 심화,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의 국내정책 표류, 호세피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을 앓는 브라질로 대변되는 형국이어서 미국에 뚜렷한 도전을 주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브라질 밀월시대를 즐길 수 있었다. 보우소나루는 군퇴역이후 오랜 의회활동 경력을 갖고 있기는 하나 비기성정치세력 출신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공통점을 지녔고, 통치스타일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모로 흡사했다.

그러나 그 역시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여러모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바이든이 인권, 민주주의, 환경, 반부패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2022년 대선을 앞둔 보우소나루는 위협을 느낄 수 있다 (Stuenkel 2021). 더욱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석방된 룰라의 재출마 가능성이라는 변수 앞에서 경제적 실적을 내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제1 수출상대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보우소나루의 선택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고립화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향후 전망

중남미의 두 주도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현 지도자들은 트럼프 등장 of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트럼프시대에 역설적으로 이들과 밀월관계를 유지한 만큼, 반트럼프 가치를 내세우는 바이든 시대의 미국 정부는 이들과 순탄한 관계를 펼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더욱이 오늘날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팬데믹 등 각자의 국내문제가

절박한 상황이어서 베네수엘라 위기의 해결과 같은 역내 이슈앞에서 지역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집권 첫해인 2021년 중남미 각국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이 최대의 정책과제이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11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해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고 이중 절반가량이 멕시코인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AMLO와의 협력에 청신호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중미난민 출신국가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빈곤 및 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미국이 40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WSJ 2/9/2001). 그러나 다른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AMLO 대통령의 백신확보 협조요청에 대해 미국 국민 우선접종 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영 시노팜(Sinopham)사의 Sinovac 백신 보급과 함께, 백신확보를 위한 전대차관 제공 등

대대적인 의료외교를 중남미지역에서 펼치고 있다. 3월 1일 현재 멕시코가 확보한 백신은 330만 도즈인데 대부분은 유럽, 인도, 중국, 러시아로부터 온 것이었다(WSJ, 3/1/2021). 칠레, 페루의 경우도 중국의 Sinovac백신으로 지난 2월에 접종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소재 Butantan연구소에 Sinovac 기술이전을 통해 현지생산을 허용했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경우는 러시아의 Sputnik V로 백신보급이 시작되었다 (WSJ, 2/24/2021). 이렇듯 백신을 둘러싼 미국의 외교입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매우 좁은 상황이다.

둘째, AMLO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가주도경제 패러다임이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방식은 바이든이 복귀하고자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마약전쟁, 인권 문제, 기후 변화 및 환경보호 정책들에서도 충돌여지는 남아있다. 더욱이 이러한 가치간 충돌은, 중남미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팬데믹 종료단계에서 매우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미-중남미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이 오기 전 2019년 후반은 이념갈등과 사회적 불균등을 배경으로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

비아,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지에서 정치 사회적 소요가 일어났다. 그 때문에 2020년은 혼란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제한 및 긴급재난 지원금 살포 등이 이를 덮어버린 셈이다. 유일하게 칠레만이 제헌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을 뿐이다. 팬데믹 와중에서도 페루,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등지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소요가 발생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자금을 요청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2021년은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중남미 각국이 인도적 지원 및 개발원조가 필요한 가운데 각 개별 국가를 겨냥한 미국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팬데믹 종료에 즈음해 도래할 중남미 각국의 혼란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 가치의 틀 속에서 미-중남미 관계를 정립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문헌

- Dresser, Denise (2021). "Mexico's President Is Spoiling for a Fight with Washington," Foreign Affairs Feb. 1.
- Stuenkel, Oliver (2021). "Latin America's Darkest Hour: Can Biden Heal a Fractured Hemisphere?," Foreign Affairs Jan. 28.
- Wall Street Journal. (2021). "Biden and Mexico to Cooperate on Migration Despite Tension," Feb 9.
- Wall Street Journal. (2021). "Biden Isn't Considering Sharing Covid-19 Vaccines with Mexico." March 1.
- Wall Street Journal. (2021). "For Covid-19 Vaccines, Latin America Turns to China and Russia," Feb. 24.

저자소개



김원호 교수는, 미국 Texas-Austin대에서 중남미지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한중남미협회 사무총장, 아시아 대양주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미국 Johns Hopkins대 고등국제학대학원 Fulbright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LATIN AMERICA **FOCUS**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과 브라질 외교지형의 영향

조 희 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트럼프와 볼소나로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사적으로 가장 친한 이미지를 구축했었다. 볼소나로 정부의 출범이후 지난 2년은 밀월관계였고, 볼소나로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로 각인되었다. 정치와 종교 이념적으로 트럼프의 데칼코마니였던 볼소나로는 급기야 트럼프의 재선을 간절히 기원하며 미국대선에까지 개입했었다. ‘트럼프의 재선을 진심으로 빈다’고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조작설을 언급했고, 외교관례인 정상간 전화통화 대신 편지로 축하인사를 대신했다.

바이든도 볼소나로의 심기를 건드렸다. 선거유세 때부터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비난하면서 200억불의 아마존 보호기금을 조성할테니 아마존 파괴를 즉각 멈추고, 이행을 못할 경우 경제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볼소나로는 주권침해를 비난하며 ‘외교가 안통하면 무력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관계는 밀월에서 냉각관계로 급락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브라질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적 마찰은 있겠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중남미

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브라질의 협력이 절실하다. 볼소나로가 밋다고 브라질이 미운 것은 아니다. 양국이 거래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살펴보자.

중국과 5G통신 입찰 건은 볼소나로의 협상카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이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지만 중국견제만큼은, 트럼프보다 한발 더 나아가, 동맹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포위망 구축으로 확대시켰다. 대중국 문제는 볼소나로 정부에게는 대단한 대미 협상카드다.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수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볼소나로 정부는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중국은 브라질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했으나 오히려 양국 교역액은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수입품이 원자재와 농축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선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볼소나로 정부가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미온적일 것이라는 점은 아르헨티나와의 관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2019년에 중도좌파인 알베르토 페르난

데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아직도 관계회복에 미온적이다. 좌파정부가 미운 것이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볼소나로의 재선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점은 바이든도 마찬가지이지만, 올 해 브라질의 5G 사업에 중국 화웨이의 참여를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현안이다. 작년 10월 브라질은 미국과 ‘깨끗한 네트워크’협정을 체결하여 5G 통신망 제공자는 중국정부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볼소나로 정부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대단한 협상카드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와 아마존 인디오 인권보호문제는 브라질의 아킬레스건

바이든 정부는 아마존 산림보호와 인디오 인권보호 관련해서는 볼소나로 정부와 불협화음이 클 것이다. 볼소나로 정부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어 불란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큰 효과가 없었으나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적 공조가 가능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브라질을

상대로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할 가능성은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가진 협상패가 많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OECD가입조건으로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그리고 지재권 보호를 압박할 수 있다. 유럽연합도 아마존문제가 해결 안되면 EU-브라질 FTA의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브라질은 작년 10월에 무역경제협력협정(ATEC)의 재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또한 환경과 원주민 인권문제를 빌미로 비준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관계는 역사적으로 실용적 등거리 원칙이 지배적

이러한 외교현안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단순히 양정부의 관계에서 조명해서는 안된다. 독립이후 지금까지 200년이 넘는 동안 양국은 항상 등거리를 두고 실용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정학적으로 미주대륙의 안정을 위해 남미에서 브라질의 대국 역할론에 무게가 실려왔다. 바이든이 볼소나로를 싫어한다고 해서 브라질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볼소나로도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지만, 바이든과의 불편한 관계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4년 주기로 당의 정강을 발표한다. 2020년 정강은 국내외 주요 한안들에 대한 당의 정책 방향이 담겨있어 바이든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좌표가 된다. 바이든 정부의 급선무는 트럼프 정부가 와해시킨 NATO 및 동맹국 관계의 복원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이다. 따라서 외교코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및 동맹국 시스템의 복원과 인권, 환경, 기후변화, 빈곤해결, COVID-19의 국제공조 등의 큰 틀에서 작동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 등 비민주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앞세운 외교적 압박을 하겠지만 트럼프와 같은 독자적인 행동은 안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스펙트럼은 중도에서 온건좌익의 성향으로 민주당내에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해 놓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민주당 정당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부통령을 2번 역임했기 때문에 행정부 업무에도 능하다. 최근 미국의 지식인 클럽은 ‘바이든 실행 정부의 대브라질 권고안(Recommendations on Brazil to President Biden and the New Administration)’을 내놓았다. 또한, 당파를 초월한 미국 전직관료들의 모임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정책 권고안을 채택했는데, 모두 아마존

보호를 전제조건으로 브라질과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환경, 인권, 빈부격차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가치외교의 핵심주제였다.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앙리끼 까르도조와 룰라 정부를 거치면서 가치외교는 브라질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였다. 이러한 외교자산을 볼소나로는 단 2년 만에 와해시켰고, 브라질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숨을 죽이고 있다.

볼소나로 대통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도 대선은 볼소나로 대통령의 정치적 현안이다. 트럼프대통령이 COVID-19에 올바른 대처를 못한 것이 재선실패의 큰 사유가 되었듯 볼소나로 대통령도 재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룰라 전대통령이 정계에 컴백한 것이다. 룰라는 첫 대중 연설에서 볼소나로의 COVID-19 대응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룰라의 대선경쟁 가능성은 미국과 중국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그 동안의 태도를 바꿔 바로 미국과 중국에 백신공급 원조메시지를 보냈다. 브라질의 정치지형이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강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볼소나로의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이제 물라가 어떻게 회생할지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볼소나로 정부는 지정학적으로 순망치한의 관계다. 바이든 정부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환경과 인권 등 각론에서는 국제사회를 통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2020.10. 브라질 대선에서 볼소나로 정부의 교체를 희망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저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법과 중남미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질 상파울로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브라질 상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브라질 데마레스트 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저서로는 『Moderno Direito Internacional』, 『Introducao ao Direito Internacional』, 『브라질 외국인투자법』 및 다수의 국내외 연구논문이 있다.



LATIN AMERICA **FOCUS**

쿠바 관계변화 관찰 및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설치 가능성 시나리오 전망

하 상 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쿠바 라울 카스트로의 퇴장

2021년 1월 16일자 CNN의 쿠바 관련 기사(Patrick Oppmann가 ‘What Cuba wants from Joe Biden’)의 서두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쿠바만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시작한다.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쿠바에 대한 지난 60년 동안 지속해 온 경제적 금수조치의 강화, 미국인 여행 규제 확대, 미국에서 쿠바로 송금 규제, 쿠바 혁명 당시 미국인 자산의 몰수에 대한 소송 허용, 쿠바를 테러국가로 지정,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쿠바 출신 의사와 간호사 고용 금지 압박 등 가장 힘든 정치외교적, 경제적 시련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5년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역사적 국교 정상화와 양국 간 데탕트 (화해와 평화적 공존) 분위기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의 경제개혁 등의 노력이 트럼프 4년 동안 다시 과거의 냉전 관계로 회귀하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 지형의 변화(바이든의 등장)는 지난 4년 동안의 대쿠바 정책에 다시 역회귀로의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물론 오랫동안 미국이 지향해 온 대 쿠바 외교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지지’ 그리고 미국 내 ‘쿠바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존중’ 등은 여전히 대쿠바 외교 정책의 중심 원리로 작동 중이다. 양국 간 데탕트 시대로의 전환 전망은 언급한 미국 내부 변수 외에도 쿠바 내부 정치 변화에서도 전망된다. 이미 2021년 현재 89세인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쿠바 공산당 서기장에서 다가오는 4월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령 정치로 인한 정치 참여 한계, 쿠바 혁명 1세대들의 점진적 퇴장 분위기 등이 고려되어 이미 2019년 10월 행정부의 수반 자리를 디아스 카넬(1960년생으로 혁명 후 세대 및 쿠바 공화국 대통령: Miguel Mario Díaz-Canel Bermúdez)에게 물려 준 후 점차 쿠바 정치 권력의 핵심 역할을 해 왔던 쿠바 공산당의 수반 자리에서 은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마지막 권력인 쿠바혁명군 최고사령관 직 유지).¹

정치외교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쿠바 내부에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쿠바 정부는 또한 경제적으로도(비록 COVID-19 상황이지만) 향후 시장 중심, 특히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¹ 2006년 피델 카스트로는 1997년 제5차 공산당 대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동생 라울 카스트로(75) 국방장관에게 쿠바 3대 권력인 행정부의 국가평의회 의장, 정치 권력의 핵심인 쿠바 공산당 제1서기장, 마지막으로 쿠바혁명군 최고사령관 직을 넘겨준 바 있다.

그동안 제한해 왔던 다양한 공공 부문 규제 완화해 통해 사적 부문의 투자와 고용 참여를 확대한다고 발표해 오고 있다. 공식 통계로 기존 60만 명의 자영업 부문을 좀 더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IT 산업 등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부문, 건강의료 부문 그리고 언론과 방송 등 매스 미디어 부문, 교육 부문, 국방 부문 등에 대한 사적 부문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어 실제 시장 개혁은 멀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더하여 2021년 올해 미로와 같은 쿠바의 이중통화 시스템의 통합은 새로운 시장 질서를 구축해 가는 데에 커다란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본 페이퍼는 현재 미국과 쿠바 간 정치 지정학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외교적 과제인 한국-쿠바 간 이익대표부 설치 문제를 놓고 관련된 이해당사국들의 다양한 관계 변화와 상황 차이를 시나리오 분석 차원으로 설정 (현상유지, 관계회복, 과거회귀)해 그 가능성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적 ‘바느질’ 끝맺음: 쿠바와의 새로운 외교 관계 모색

2021년 코로나 극복 국면, 미주 대륙에서 미국과 쿠바 내부의 정치 지정학적 변화, 특히 양국 간의 데탕트 분위기 전개 등 이러한 대내외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대중남미 외교, 특히 1960년 이후 중남미 33개 국가들 중 유일하고 국교가 단절된 대쿠바 외교에 대한 바느질의 끝맺음 기회가 보이고 있다. 쿠바에 우리나라 이익대표부의 설치 가능성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평가해 보면 위와 같은 미주 대륙 내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한국-쿠바 간 외교적 관계 회복 혹은 변화의 모든 것을 전망해 주지는 않는다. 아래와 같은 외교 관계 변화 전망을 위해 관련된 국가들의 대내외적 변화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설치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 확대(예를 들어 대중남미 외교에서 마지막 남은 이데올로기 빗장 풀기, 최근 쿠바 관광 급증과 국민 안전보호, 중미-카리브 외교의 진전, 무역과 경제 시장 확대, 기후 및 환경외교의 거점으로서 쿠바와의 외교적 관계 전환, K-pop 등 문화교류 협력을

통한 공공외교 확대 등)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간 북한과 혈맹 관계에 있어 공식적인 국교 정상화 이전에 비공식 수준에서 양국 간 이익대표부 설치의 미래 발생 가능한 양국 간의 국가이익 실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쿠바와의 경제협력 증진, 국민의 안전보호, 국제사회에서의 양국 이미지 제고 등 많은 기대와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서비스는 조속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간 긴장으로 인해 공식적 국교정상화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며, 향후 외교적 옵션 중에 차선책으로나마 양국 간 이익대표부 설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제 정치의 변화 및 이해당사국들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 고려와 함께 ‘현상유지’, ‘관계회복’ 그리고 ‘과거회귀’라는 시나리오 상에서 관찰될 수 있다.²

² 본 내용은 2020년 10월 외교부 정책보고서 『쿠바정책연구: 한-쿠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 ‘이익대표부’개설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참고해(수정 및 보완) 2021년 3월 시점,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등장과 다가오는 4월 라울 카스트로의 쿠바공산당 제1서기장 퇴진 상황과 연계해 미래 한국-쿠바 간 이익 대표부 개설 가능성을 시나리오 분석해 본 것이다.

1. 한반도 북-미 평화회담 재개와 긴장 완화 시나리오

현상유지: 2018년/2019년처럼 북미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남-북-미 간 긴장완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다시 마련될 경우, 뒤이어 한-쿠바 이익대표부 개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한반도 내 남-북 간 비핵화 합의, 평화 구축 및 미래 통일 논의라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후속 사업이 이어질 경우, 한-쿠바 간 이익대표부 개설은 남-북 이슈에 묻혀 개설이라는 정치 외교적 상승효과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관계회복: 가까운 미래에 제3차 북미 협상 혹은 남-북-미 평화 프로세스 단계에서 한-쿠바 간 이익대표부 개설 아젠다를 주요 의제화시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한-쿠바 이익대표부 개설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 외교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쿠바 이익대표부 개설을 남-북 간 협상으로 의제화시키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영사 업무만이라도 조속히 개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1977년-2015년 미국의 아바나 스위스 대사관 내 미국이익대표부 개설과 활동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이익대표부 운영 경험이나 쿠바가 수용할만한 중립국으로서 스위스대사관에 한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다 (스페인 혹은 멕시코 대사관과의 협력도 가능하다).

과거회귀: 북-미 회담 혹은 남-북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렬되고 과거의 냉전체제로 회귀하면, 한-쿠바 간 이익대표부 개설 혹은 국교 정상화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관계회복 시나리오를 따를 때, 한-쿠바 간 이익대표부 개설은 우리나라 국가이익 중에 실리보다는 명분 챙기기 전략이 외교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국제경제 및 무역 분야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카리브 쿠바는 여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아직은 매력적인 시장이나 투자 대상 혹은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 구매력이 큰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계회복을 통해 향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전초 단계에서 이익대표부 개설 합의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어야 하며 낮은 외교적 비용, 예를 들어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ODA)을 통한 외교적 디딤돌을 놓는 외교적 행동이 요구된다. 이 경우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 시장 개혁 중인 쿠바의 경제사회 발전 분야 국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쿠바 정세 변화 시나리오

사실 국가의 정치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대내외적으로 반영해 결정되어 온 외교를 통한 국가이익 실현은 쿠바에서도 시대를 걸쳐 변화 발전해 왔다. 특히 외교에서 국가이익에 대한 시대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역시 1959년 쿠바 혁명이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시대를 구분하여 쿠바의 국가이익을 1959년 혁명 전과 혁명 후로 나누어 구분한다. 예를 들어, 혁명 전인 20세기 초반 쿠바 지배계급 혹은 외교에 있어서 국가이익 실현은 종속된 미국 제국주의(패권)에서 탈출과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어 왔다.

쿠바 외교사에서 혁명 전 쿠바의 국가이익은 카리브 지역 그리고 이에 기반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전제되어 왔으며 20세기 초반에도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쿠바가 카리브 지역에 위치해 있음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895년-1898년 쿠바의 독립 전쟁 이전에도 미국은 쿠바를 병합하기를 바랬으며 실제 1898년 미-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 쿠바는 미국 보호령으로 점령당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과 지배-종속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는 1959년 쿠바 혁명까지 지속되었다.

미국-쿠바 간 이러한 지배-종속의 역사와 지정학적 현실을 염두에 둔 쿠바의 국가이의를 정의해 보면 당연 ‘독립성’과 ‘자결권의 획득’에 있었다. 쿠바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세 마르티(José Martí)는 열강들의 식민지배로부터 쿠바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경제적, 문화적 종속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해 왔다.

또한 그의 라틴아메리카 독립사상과 자주 인용되는 마르티의 금언 중 ‘조국은 인류다(Fatherland is Humanity)’라는 문장에도 반영된 ‘인간연대에 대한 가치’ 그리고 1959년 쿠바 혁명에 내재된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정치 사회적 사고를 기반으로 통합된 국가이의에 대한 정의는 1) 독립, 주권, 자결권을 보존하고 방어하며 안보를 지키는 것; 2) 단순한 외부세력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국가 발전을 촉진시킬 외부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 3) 전통에

기반한 대중적이고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정부 형태를 보호하는 것; 4) 변영과 공정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 및 촉진; 5) 호세 마르티(José Martí)가 '인간에 대한 완전한 존엄성이 공화국의 첫 번째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존엄 유지; 6) 쿠바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 7) 쿠바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제 가능성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라고 깊이와 넓이에서 다양하게 진화 발전해 왔다.³

현상유지: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쿠바 내부 정치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가문 정치 지속 혹은 혁명 1세대 정치 리더십의 존속, 북한과의 혈맹 관계 지속, 그동안 쿠바가 추구해온 중남미 역내 국가들에 대한 혁명의 수출 및 연대의 강조(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등),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외교 기조 유지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설부르다.

³ Carlos Alzugaray, 2012 'Cuban Revolutionary Diplomacy 1959-2017', pp. 169-180.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국교 정상화 당시 약속한 정책의 계승, 예를 들어 쿠바 국가이익 실현 목표와 부합하는 미국의 봉쇄 또는 경제금수 조치 해제, 플랫폼 수정안에 의한 관타나모 해군 기지 반환, 쿠바 이민 조정법의 철폐 등 22개의 정부 간 협정이 이행된다면 현상유지는 힘을 잃을 수 있다.⁴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 전개는 우리나라 이익대표부 개설에 해빙 무드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과 혈맹 관계를 외교적 전통으로 유지하고 싶은 카스트로 가문 정치 리더십, 혁명 1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존속의 문제는 오히려 이익대표부 개설을 방해 할 수도 있다.

관계회복: 2006년-2018년 사이 쿠바 외교는 미국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역내에서도 많은 관계의 진전을 이루었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국제회의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개최되었다. 2015년 파나마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의에 미국의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오랫동안 정부군과 게릴라 반군 사이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역사적 회담인 콜롬비아 평화협정을 쿠바가 중재해 아바나에서

⁴ 물론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부가 서명한 약속은 종종 서명한 국가 간 상호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약속 불이행).

개최했다. 다른 이웃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비록 정치 이데올로기가 다른 보수우파 정부라도)과 양자 간 외교 관계로 발전했다.

중국은 쿠바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외교적 동맹국이다. 2009년 러시아의 디미트리 메드베데브(Dimitry Medvedev)가 아바나를 방문했으며 석유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경제협정이 체결되어 광물 및 에너지 탐사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중이다. 2014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의 국가채무 중 90%(약 350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으며 해양 석유 개발 산업에 투자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08년에 쿠바는 유럽연합과 함께 새로운 국제협력 및 정치적 대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18년에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아 훌륭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파리 클럽에 대한 부채에서 쿠바는 혜택을 입었고 유럽으로부터 관광객은 단순 비즈니스 방문자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 유일하게 무비자 관광 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의 외교관계는 더욱 순항 중에 있으며 캐나다 내 정권 변화, 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변화와는 전혀 관계없이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멕시코도 동일한 관계 유지). 쿠바 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투자를 포함, 캐나다 관광객의 쿠바 방문자는 해마다 증가해 오고 있다.

2002년 카스트로의 일본 방문 이후 리더로서는 처음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9월 쿠바를 방문한 이후 양국 간의 국제협력이 늘어나고 있다(JICA 활동 증가). 외교적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쿠바에 일본 총리의 공식 방문은 그동안 일방적이었던 일본의 친미주의 외교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쿠바의 보건의료 외교는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도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이익대표부 개설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쿠바의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 회복 선상에서 실현 가능하다.

과거회귀: 2006년-18년 사이 쿠바 외교는 제3세계 정치외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6년 9월 아바나는 제14회 비동맹국가 정상회의를 라울 카스트로 주도로 개최했다. 특히 남-남 협력을 리드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 분야에서 쿠바는 의료외교를 강화해 쿠바 출신의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을 남미 베네수엘라는 물론 남아프리카에서 태평양 제도에 이르는 모든 대륙에 파견하였으며 중동 카타르, 이란, 아시아의 베트남, 아프리카의 앙골라 등 다양한 대륙과 국가들을 포함해 외교 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쿠바의 비동맹국가 우선 외교 선택은 이익대표부 개설 논의를 후퇴시키는 중요 요소이기도 하다.

3. 미국 정세 변화와 영향 시나리오

2014년 1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1월에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대쿠바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고, 2015년 7월 1일 양국의 수도에 기존의 비공식적 외교관계였던 이익대표부를 격상해 워싱턴과 아바나에 각각 대사관을 재개설할 것을 약속했으며, 마침내 7월 21일 공식적으로 대사관을 개설함으로써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1년 1월 쿠바와 단교한 이래 53년 만에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회복했다.

현상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쿠바 국교정상화가 실질적인 양국 간의 관계 증진을 이루어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조치(embargo)는 지속적이며, 미해군 관할 관타나모 해군 기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제재조치가 해제되거나 쿠바의 영토 주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쿠바 간의 자유로운 무역거래는 물론 대금 결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을 통한 시민들 간의 대화나 접촉의 확대 또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국내 정치 메커니즘 상 경제제재와 관련된 엠바고 해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존재하는 미의회의 결정인 이유로 미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관계회복: 한국-쿠바 이익대표부 개설 가능성에 대한 혹은 어느 개별국가 내의 정치 변화와 함께, 특정한 시점을 정확히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것이다. 다만 시나리오 차원에서 예측한다면, 예를 들어 현재 전통적인 혁명 1세대의 외교 기조를 가진 쿠바 정치권력의 핵심인 쿠바공산당 라울 카스트로 제1시기가장이 2021년 4월 퇴진하고 그 권력 공백 상태를 행정부 권력을 승계한 혁명 2세대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계승한다면 한국-쿠바 이익 대표부 개설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뒤를 이어 미국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 사이 대쿠바 외교 정책 변화 수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 단교한 지 53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했고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 여행 자유화, 기업의 쿠바 진출 허용, 양국 정기항로 개설 등 쿠바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왔다. 동시에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도 비록 미-쿠바 해빙 조치인 여행·투자·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거나 철회해 왔지만, 외교에서 가장 극단적 결정인 쿠바와의 단교까지 이루지 않았다. 새로 등장한 민주당 바이든의 선택은 민주당의 외교 정책 계승과 함께 트럼프와는 다른 관계회복을 요구할 것이다.

과거회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쿠바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쿠바의 럼주와 시가 수입을 추가로 금지하며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도 사실상 봉쇄했다. 대통령으로 집권하자마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치적으로 불렸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조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지난 2019년 6월에는 쿠바 여행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2018년 이후 2년간 그리고 2020년 오늘날 팬데믹 위기에서도 지나친 제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나선 것은 2020년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를 플로리다주의 쿠바 이민공동체 표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쿠바 외교 정책도 이러한 미국의 국내 요인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쿠바 공동체들의 입장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

2021년 3월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쿠바의 쿠바공산당 제1서기장 라울 카스트로의 퇴진이라는 정치적 사건은 미국-쿠바 간 관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쿠바 외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외교적 과제인 한-쿠바 국교 정상화는 2015년 미국-쿠바 간 국교정상화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 보기도 했다. 다만 양국 간의 외교적 목표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본 페이퍼는 이익 대표부라는 비공식적 관계를 차선책으로 설정해 미래 한국-쿠바 간 외교 관계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을 해 보았다. 특히 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변국들의 상황과 태도,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수들(양면게임) 그리고 잠재적인 변화 수준(현상유지, 관계회복, 과거회귀) 등을 설정해 분석을 해 보았다. 목표와 방향 그리고 수준에 대한 외교적 논의가 활발해져 우리나라의 대쿠바 외교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학사), 중남미지역학(석사)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국제정치 경제(IPE 석사), 리버풀 대학에서 중남미지역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에서 재직 중이며, 학부 및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 정치경제

및 중남미 환경 정치 관련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역동적인 발전 정책에 대해, 지만지](역서), [라틴아메리카 좌파정부: 성공과 실패의 정치경제학](역서), [현대 카리브의 삶과 문화](역서), [중앙아메리카: 분열된 국가](역서) 등이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환경 분야 관련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환경정의: 쟁점, 약속, 실행](역서), 등 다수 저서 활동을 하고 있다.



LATIN AMERICA **FOCUS**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역내 촉진자 칠레

임 수 진 (대구카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미국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방향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은 대중남미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면서 중남미를 16번이나 방문했고,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도 26번 방문하는 등 중남미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G20 정상회담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것이 유일한 중남미 방문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었기에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뉴노멀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르다. 중남미의 상황도 당시와는 다르고, 미국은 현재 국내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또 대선을 거치면서 심각해진 양극화된 사회, 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등 당장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자국중심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며,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동맹협력은 회복하겠지만, 대중남미 외교정책은 미중 무역갈등, 중동 문제와 비교하면 그 우선순위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국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미 지역 이주 및 경제발전, 중남미에서의 중국 영향력 견제, 통상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역내 협력파트너로서 칠레의 역할을 전망해본다.

중남미 동맹 복원의 파트너 칠레

미국의 대중남미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동맹 복구가 시급하지만, 현재 중남미 국가 중 바이든 행정부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국가가 부재하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역내 리더 국가인 멕시코는 미국과 노동, 환경, 통상 문제에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onaro)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의 철학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미국과 우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과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an Piñera) 대통령이 협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콜롬비아와는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대베네수엘라 정책 실현을

위한 양자협력을, 칠레와는 다양한 의제를 공유하면서 다자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피네라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한 정상 중 한 명이다. 정상 간 통화 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칠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 외교정책 기조는 남미 경제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평화, 인권, 민주주의 증진, 환경보호, 빈곤 퇴치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제반 활동 등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양자적, 다자적 현안에 대해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한 불평등에 대한 저항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탄압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헌법 개정 과정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안정되어가고 있고, 2021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이 높은 특정 후보가 없는 가운데 좌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기존의 대미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의 남미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좌파세력의 부활과 동맹 형성을 견제하는데 칠레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미에 비해 남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파동맹을 강화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을 저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좌파동맹의 반미 친중국 노선에 힘이 실리면서 역내 중국 영향력은 확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주기구(OAS)와 리마그룹(Lima Group) 등을 통한 서반구 다자외교 재건 구상은 실현되기 어렵다. 칠레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파인 아야만드(Allamand)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 베네수엘라 무력 사용을 비판하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절차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는 해결방식에서 같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2021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열리는 미주정상 회담에서 대중남미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칠레의 차기 정부가 다자외교의 역내 협력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국중심주의 및 이념적 거리 차이로 인해 역내 통합이 과거에 비해 소원한

상황이므로 칠레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파트너로서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역내 다자협력의 틀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칠레·미국 양자관계 변화

2014년 3월 미셸 바첼렛(Michelle Bachetet)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칠레를 방문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동맹관계임을 강조하였다. 경제 협력에서도 주요 교역국으로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미국과의 수출입은 칠레 교역국 중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2014년 이후 미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줄지 않았으나 중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대중남미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칠레의 리튬과 구리 사업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광업, 농업, 전기통신 등 전략적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칠레 내 스페인 전력회사가 중국 기업에 매각되기도 했다. 칠레는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대일로 지지 표명을 하였으며, 중국과 중남미 지역간 교역 및 투자의 촉진자 역할을 희망하였다. 한편 피네라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촉진자 역할을 강조하며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양측과의 관계를 생산적인 관계로 유지하려는 전략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칠레에 방문해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표했고, 화웨이의 칠레진출에 우호적이었던 피네라 행정부는 해저케이블 사업에서 일본 루트를 선택했다. 사실상 중국이 배제된 것이다. 칠레는 최대교역국이자 투자자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와 같은 압박을 가하는 방식보다는 대중남미 협력 강화 측면에서 칠레에 촉진자 역할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있어서도 칠레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공급원의 다양화 및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칠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청정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독일과는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기후변화와 연결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은 칠레 정부와 공동으로 브라질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단 두 건으로 중미 이민 문제와 아마존 환경보호였다.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남미 지역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칠레 정책에 있어서도 칠레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외에는 국내문제와 연관된 의제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과 인센티브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에 부여할 인센티브로는 역내 다자외교 복원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 예상되며, 브라질 아마존 환경보호, 좌파동맹 견제를 위한 미국의 파트너로서 역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19년부터 공식인 주칠레 미국 대사 임명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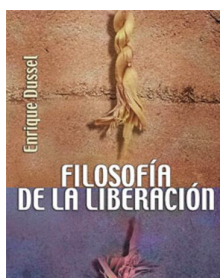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남미 정당, 선거, 외교이며 논문으로는 <중남미 대통령제 국가의 정당연합>, <우루과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과 정치적 효과>, <환경과 인간안보: 칠레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LATIN AMERICA BOOK JOURNEY

두셀의 해방의 철학과 철학의 해방

박 치 완 (한국외대 철학과)



“철학은 궤변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실로 철학일 때 철학을 깊이 숙고하지 않는다. 해석적 범주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학적인 예언자를 제외하고는 철학적인 문헌들을 심사숙고하지 않는다.” - E. Dussel, PL: 3.

1. 제1세계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엔리케 두셀(1934~)은 『해방의 철학(Filosofía de la liberación)』 (1977) 영어판 〈서문〉에서 이 책이 마치 “횡포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소외받은 어린이와 같다”고 적고 있다.¹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두셀이 자신의 철학을 통해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유럽중심주의적 철학(Eurocentric philosophy)’이다. 두셀에게 유럽중심주의적 철학은 근대성, 식민성, 전체성의 대명사이며, 그는 제3세계에서 지역-로컬 철학이 발아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¹ E. Dussel, *Philosophy of Liberation*, trans. by A. Martinez and C. Morkovsk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5, 〈Preface〉 - PL로 표기.

유럽중심주의 삼두마차를 두셀만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A. 끼야노, W. 미놀로, R. 그로스포겔 등 반유럽중심주의적 활동은 이미 하나의 전선이 형성돼 있으며, ‘새로운 철학적 운동’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실천되고 있다. 그의 표현대로, 이는 “어린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고”(〈Preface〉)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들의 신철학 운동은 라틴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널리 영어권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제3세계로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철학과 미국철학을 주로 강의하고 있는 한국에서만 어쩌면 이들의 외침에 대해 무관심,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른다. 제3세계 철학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대한민국 철학계의 현실이다. 실제 라틴아메리카 철학을 가르치는 대학도 없고, 스페인어권에서 어문학/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철학계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 하겠다.

시공간을 초월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철학이기에 두셀의 ‘라틴아메리카 철학’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두셀이 사용하는 언어가 제1세계의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아니기에 그의 철학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인가?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해 감히 두셀의 『해방의 철학』을 소개하기로 맘먹은 것은 그의 철학이 이미 유럽 중심주의적 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그의 대부분의 철학적 연구결과물들은 영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를 접하는 독자는 대폭 늘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세계 철학계가 두셀에 주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감히 장담한다.

1970년대를 전후해 전 세계로 확산된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식민주의, 포스트 비판이론, 페미니즘 등으로 인해 유럽중심주의적 철학은 그 구심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철학이 ‘민주화’되었다고나 할까. 철학이 민주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배타적 세습 재산처럼 여겨지던 철학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철학(worldwide philosophy)이 될 수 있는”(〈Preface〉)문이 열렸다. 이는 역설적으로 유럽의 지배자, 정복자, 통치자의 관점이 아닌 지구의 억압받은 자, 세계사에서 저주받은 자에 의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철학이 새로운 “철학의 기점(基點)”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두셀의 해방의 철학은 이렇게 세계의 중심을 점유 또는 전유하고 있던 유럽중심주의적 철학을 단지 비판하거나 재해석·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중심주의적 철학에서 주변 부화된 것들을 철학의 중심으로 복원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해방의 철학』을 제3세계의 독자가 아닌 “현재 세계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독자들이 읽어야 할 것” (<Preface>) 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유럽인의 우월성의 신화, 인종차별주의, 경제적 착취, 정치적 지배”의 폐단이 무엇인지를 『해방의 철학』을 통해 반성하라는 것이다.²

2. 두셀이 ‘반데카르트적 성찰’을 외치는 이유

이렇게 간략히 『해방의 철학』의 <서문>을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두셀 철학의 뿌리와 향방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에게 철학은 결코 순수하지도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에 따르면 철학은 언제나 ‘정치적 공간’에서 기획되고 탄생했다. 정치적 공간에서 철학이 기획되고 탄생했기 때문에 뉴턴의 물리학 공간이나

² E. Dussel, “World-System and “Trans”Modernity”, *Nepantla: Views from South*, Vol. 3, Iss. 2, 2002, p. 229.

현상학의 순수의식 공간에서처럼 익명의 탈정치적 공간 (cf. PL: 1)은 그의 해방의 철학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철학에는 오직 중심 세계의 공간(the space of world center, PL: 1)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코기토’도, 헤겔의 ‘정신’도, 후설의 ‘의식’도, 하이데거의 ‘존재’도, 레비나스의 ‘타자’도 바로 이 중심 세계의 공간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고 강화하는 데 공헌했을 뿐이다. 두셀의 해방의 철학은 정확히 이 ‘중심’을 겨냥한 반(反)철학이다. 그가 철학을 순수 사유 공간이 아닌 ‘지정학적 공간(geopolitical space)’이라 전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해체/재구성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두셀에 따르면, 지난 200여 년 동안 세계의 중심 공간은 유럽이 점유·전유했다. 이를 21세기 중반부터는 미국이 이어받아 유럽이 식민지 개척기에 저질렀던 ‘황포한 아버지’ 역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유럽중심주의적 철학이 태동된 것이나 미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나 중심/주변의 지정학적 관계의 역학에 따른 것이며, 철학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두셀의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는 철학이 구미철학(Euro-american

philosophy)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유럽에서 동양철학(중국, 인도)을 전공 교과목으로 강의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철학’ 하면 ‘유럽철학’을 의미할 정도다.³ 이는 철학이 ‘다양성의 꽃’이 아니라 ‘획일성의 무기’라는 의미와 같다. “보편적 진리의 탐구”로서 철학은 오직 “서구유럽철학의 전통”에서 강조해온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⁴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도 비교철학이나 제3세계의 철학은 강의하지 않는다. 이는 철학이 ‘모든 인간’, ‘모든 문화’, ‘모든 지역-로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두셀이 심지어는 존재론도 유럽에서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도구나 개념으로 이해되었을 뿐이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중심을 점유·전유한 유럽이 주변부를 구성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재론은 결코 “무장소(nowhere)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PL: 3)니 ‘모든 곳(everywhere)’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생각일랑 마라는 것이다.

³ B. W. Van Norden, *Taking Back Philosophy: A Multicultural Manifesto*,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참조.

⁴ B. W. Davis, “Dislodging Eurocentrism and Racism from Philosophy”, *Comparative and Continental Philosophy*, Vol. 9, No. 2, 2017, pp. 115-116.

바뀌 말해, 지리적으로 ‘유럽’에서 탄생한 철학이 ‘모든 곳’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의 ‘해방의 철학’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를 극복하는 데 있다.

앞서 우리는 유럽중심주의적 철학의 삼두마차로 근대성, 식민성, 전체성을 언급했다. 두셀은 이 삼두마차의 중심에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cogiti, ergo sum)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정복한다(ego conquiro)”가 “나는 생각한다(ego cogito)”의 실제 토대라고 비판한다 (PL: 3). 결국 유럽의 타자에 대한 지배와 타문화에 대한 억압이 바로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두셀이 ‘반데카르트적 선언’을 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⁵ 중심을 점유·전유한 유럽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철학을 이제 재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⁵ E. Dussel, “Anti-Cartesian Meditations: On the Origin of the Philosophical Anti-Discourse of Modernity”, JCRT, Vol. 13, No. 1, 2014, pp. 11-53 참조.

3. 억압받은 자, 희생된 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철학

두셀에게 철학은 유럽의 철학자들이 ‘비철학적인 것’ (야만적인 것, 계몽이 필요한 것 등)이라고 치부했던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철학적인 것’은 유럽중심주의적 철학의 외재성(exteriority)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학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외재성에서 철학의 원형을 찾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동시에 외재성에 속한 자들이 철학을 주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요청이자 다짐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때 철학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반성을 수반”(PL: 3)할 수 없다. 철학은 당연히 ‘구체적 현실’에서 태동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유독 ‘보편의 노예’나 다름없는 철학자들은 이를 망각한다. 철학자들이 자신 앞에서 전개되는 현실보다 과거의 텍스트에 침잠한다. 제사에서 암시한 대로, 철학은 “진실로 철학일 때 철학을 깊이 숙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셀은 우리의 시선을 ‘구체적 현실’로 유도한다. ‘구체적 현실’은 어느 지역-로컬에서나 “이미 존재하는 것이자 고유 세계이고 고유 공간”(PL: 3)이다. 그런데 그동안 철학은 마치 기하학적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이해되었다. 그렇게 철학을 이해함으로써 제3세계의 철학은 불행히도 자신의 얼굴, 이름, 번지수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시작’하는 철학은 이러한 ‘보편의 편견’에서 깨어나 모름지기 철학은 지정학적 공간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수용되고 재구성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수반될 때 유럽에 의해 주변부화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인식되고, 이러한 자각이 수반될 때, 다시 말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평가할 수 있을 때, 주변부화된 제3세계가 중심부의 경계를 넘어갈(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된다.

유럽 철학과 라틴아메리카 철학, 아프리카 철학과 인도 철학, 중국 철학과 한국 철학이 서로 다른 것은 철학을 탄생시킨 토양, 즉 지적 전통과 문화가 다른 데 기인한다. 그런데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는 이를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제1세계에 지적으로 대항할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철학적 담론의 다양화(diversifying), 다원화(pluralizing)가 철학의 고유한

임무임에도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의 덫에 걸려 침묵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두셀이 침묵하는 대신 외치고, 절규하고 호소한 것은 계토화된 제3세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그의 철학적 외침과 절규는 유럽의 근대성, 식민성, 전체성의 폭력과 착취, 부정의와 불평등을 겨냥한 것이며, 유럽, 유럽인에 의해 억압받고, 희생된 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두셀에 따르면, 바로 이들, 즉 유럽의 외재성에 존재하는 자들이 “지구촌 전체인구의 75%”에 이르며⁶, 이들 지구촌의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인류의 대다수⁷”이다.

그의 해방의 철학은 바로 이들 “지구촌의 비참한 다수에게 기본적인 필요(basic needs)⁸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특히나 21세기적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이야말로 철학이 근원적으로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철학은 이들에게서 존엄한 삶이 가능하도록

⁶ E. Dussel, *The Underside of Modernity: Apel, Ricoeur, Roty, Taylor, and the Philosophy of Liberation*, Translated and Edited by E. Mendieta,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6, p. 50.

⁷ Ibid.

⁸ Ibid., p. 227.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두셀에게는 책임을 다하는 철학-윤리학의 모습이다. 두셀의 해방의 철학이 해방의 윤리학과 지향점이 같은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⁹ 제도나 시스템 밖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내팽개쳐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며, 살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 그것이 철학-윤리의 책임(cf. PL: 60)이라는 것이다.

“ [윤리적] 책임은 타자의 외재성과의 연결이다. 책임은 자신을 외상, 감옥, 죽음에 노출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 따라서 책임은 최고의 용기, 부패할 수 없는 힘, 지혜, 전체성의 구조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이다(PL: 60).”

이렇듯 두셀에게 철학은 추상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력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그 책임을 떠안는 것이 중요하다. “억압과 학대가 자행되는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실천”(PL: 195)되어야 하는 것이 철학이란 뜻이다. 유럽의 근대성, 식민성, 전체성은 자본주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식민주의, 신

⁹ E. Dussel, *Ethics of liber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exclus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3 참조.

제국주의를 개척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오늘날 “철학적 지성”(PL: 4)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두셀에게 철학적 지성은, 앞서 데카르트의 코키토 명제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 그 출발부터가 주변부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그 어떤 특권도 지킬 필요가 없을 때처럼,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확하지 않다”(PL: 4)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철학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결국 철학이 지정학적 권력의 역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권력에 종속되어 있기에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는 말이 가능하고, 이를 두셀은 “근현대 유럽철학”을 관통하는 “정치적 정의(political definition)”라고(PL: 9) 강조한다. 훗설의 ‘순수의식’도 하이데거의 ‘현존재’도 늘 “지배계급의 이념적 패권”을 대변했을(PL: 8)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즉 ‘철학적 지성’이 각 지역-로컬의 주어진 현실의 문제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정치, 경제, 군사력의 중심에 대한 관점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러한 세계의 국경을 넘어서는 (beyond) 것으로부터, 즉 주변부로부터 고찰한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셀에게는 바로 이렇게 제3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실이 “사실상 세계현실(world reality)이며, 지구 전체(the whole earth)”이다. 철학은 바로 이 “지구 위의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현실”인 이 세계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PL: 9-10). 두셀의 윤리학에서는 ‘타자’가 관건이 아니라 “타자의 현실(the reality of the other)”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민중이 세계에 선행한다”(PL: 18)고까지 강조한다. 즉 희생자를 위한 윤리적 책임, 즉 “약자를 위한 책임”이 “모든 선행성에 선행한다(PL: 19)”는 것이다.

4. 철학의 해방만으로는 부족한 제3세계의 현실

유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은 경계선 밖, 즉 유럽 밖의 세계는 여전히 제1세계와의 관계에서 식민성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학자들로 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두셀이 파악한 제3세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제3세계 내에서도 중심부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 출현한다. 제3세계의 많은 지식인이 ‘지배받는 지배자’가 태반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¹⁰ 특히 제3세계에는 제1세계로부터 정신적으로 지배받으면서 본국에서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제1세계에 의해 야만·미개로 평가받은 자신의 가족, 동료, 공동체 구성원들 앞에서 제1세계인의 흉내를 내는 웃지 못할 일을 아무 부끄럼 없이 행한다. 중심부의 권력에 의해 지성이 마비된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로컬의 현실을 망각하거나 부인하며 중심부로 자신을 피신시켜 자신의 정체성마저 숨긴다.

“이들 식민화된 철학자들(colonized philosophers)은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는 게 상례다.”(PL: 12)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중심부의 국경 밖에는 “비존재, 무, 야만성, 무의미”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유럽의 제도, 시스템은 이와 같이 “중심부에 존재하는 인간의 마초적 세계”(PL: 4)가 전 세계로 확대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¹⁰ 김종영,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2017 참조.

두셀이 ‘해방의 신학’에 이어 ‘해방의 철학’, ‘해방의 윤리학’을 연이어 시리즈로 출간하며¹¹ ‘해방’의 전선을 편 것은 ‘탈식민적 인식’에 이르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의 인류애적 해방철학이 ‘해방철학운동 (Philosophy of Liberation Movement)’으로까지 진화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젊은 대학생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는 것도 결국 타파해야 할 벽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이리라. 두셀이 해방의 윤리학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성서인지 근년에는 ‘새로운 정치적 윤리(new political ethic)’까지 주창하고 있다. 그가 판단할 때 미국 등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새로운 식민 시대”에 다름 아니며, 그 “지배 방식 또한 이전보다 훨씬 끔찍하다.” 그래서 더더욱 연대하고 단결해서 반드시 탈식민화, 탈자본화, 탈세계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론적 탈식민화(epistemological decolonization)의 최종 목표는 혁명의 완수에 있다. 이 과제는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고유문화이다.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은

¹¹ E. Dussel, History and the theology of liberation. A Latin American perspective, New York: Orbis Books, 1976 참조.

우리의 출발점이 그들과 다른 현실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명적 변화 [a true revolutionary change] 를 위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한 철학자의 고뇌는 이렇듯 미수(米壽)를 앞둔 나이임에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 의해 모든 표준화된 사상 및 철학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두셀은 믿고 있지만, 현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민중은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두셀 철학의 현재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늑대의 탈을 쓴 인간(homo homini lupus)’에 의해 지배와 정복이 계속되는 한 지구촌을 구하고 지구촌의 민중을 구하려는 두셀의 ‘세계 철학(global philosophy, world philosophy)’의 꿈은 단념되지 않을 것이다.

저자소개



프랑스 부르곤뉴대학교 (Univ. de Bourgogne)에서 베르그송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컬창의산업연구센터 소장,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에 탈유럽철학, 제3세계철학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LATIN AMERICA VOICES

한국인의 정체성과 ‘멕코연’

조상현 (멕시코 한인회 부이사)

코로나 바이러스 (이하 줄여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온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야 마스크를 쓰는 행위가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문제 (혹은 자연현상)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별반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매우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과 함께 적응하는 존재 인지라, 이제는 이곳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여러 신문기사와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을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발전으로 사물인터넷,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보통 사람들의 업무, 생활행태 등이 매우 파격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기계 치이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문외한인 저와 같은 사람조차도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하고 전자상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는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멕시코와 중남미의 많은 지역이 변화에 둔감하고 삶의 양태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 주재원, 유학생들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멕시코 시티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많은 교민들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자영업으로 삶을 유지하는 교민들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의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맞닥뜨렸고 멕시코로 발령을 받은 몇몇 주재원들은 발령자체가 취소되기도 했고 일부는 예상보다 빨리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유학생들은 멕시코에서 공부를 지속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 필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 ‘한국인 특유의 정신’이 발휘된 사건 (사회현상이라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코로나19 극복연대 (줄여서 멕코연)’ 모임입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카카오를 통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자는 취지로 초기 200여명으로 시작된 ‘단톡방’에 현재 1000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멕시코에 가장 큰 대화방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단체로 등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코연’은 현 한인회장인 엄기웅 변호사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몇몇이 모여 단톡방으로 만들고 코로나와 관련된 현안과 멕시코정부방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는 교민수가 늘어 나면서 코로나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정치, 경제 전반, 그리고 한국 코로나 관련 정보 등 상호간에 교류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멕시코연’에 등록된 몇몇 교포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와 의료장비를 기부했고 기부받은 의료장비와 마스크를 한인 단체의 이름으로 멕시코의 병원과 경찰청 등에 기부하면서 개인으로서는 받기 힘든 현지 병원들과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엄기웅 한인회장과 몇몇 교민사업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타국에서 교민단체의 힘으로 규합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단톡방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의 격려와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은 운영진, 그리고 초기 방향과 다른 길로 단톡방의 논의가 빛나갈 때 여러 사람들의 충기어린 질책과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 됩니다. 카카오톡의 단체 수다방이 이정도까지 변모했으면 그야말로 집단 지성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멕시코는 OECD 회원국이며 GDP규모로도 세계 10위권 중반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지만 불행히도 사회 기반시설과 공공부조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과 의사들의 수준이 매우 낮으며, 경찰과 같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걸린 외국인, 아시아의 조그만한 나라인 한국출신에게는 멕시코에서 코로나를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구분 해내어 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멕시코시티의 고가병원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코로나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해 많은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더 심한 중증으로 옮겨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이루고 현지 병원에 부족한 의료물품을 제공하여 일종의 교섭단체로 발전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한 교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멕시코는 우리나라나 여타 선진국처럼 깨끗한 사회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부패경찰, 몇몇 이민청과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한국인 여행자나 교포가 곤경에

빠졌을 때 멕시코 경시청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멕시코 시민경찰대’입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교통 경찰에게 구류되는 교민들, 부당한 이유로 공항이민청에 붙잡혀 있는 여행객 등 불합리한 공권력에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한인들을 돕는 단체로 한인교포, 유학생, 여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최근 시민경찰대 소속 대원 중 한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생사를 넘나들게 되자 ‘멕코연’에 있는 수 많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그의 병원비를 충당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가 필요한 한인들이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한다고 알려진 병원에 신속히 입원 치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멕코연’은 마스크나 의료기기를 받을 수 없는 멕시코 오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여러 사업가로 기부 받은 물품을 무료로 배송해주었고 외교 행랑을 통해 들여온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멕시코 시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퍼진 한인사회 배송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봉사가 가능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멕코연에 직간접적으로 후원을 해준 많은 수의 회원이 있었기에 멕코연이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멕코연’이라는 단체와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한국인들만의 정체성을 이야기 한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칫하면 국수적 민족주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멕시코 혹은 다른 나라의 중국, 일본교민들도 이와 비슷한 단체를 운영할 여지가 있고 이들 역시 타지에서의 생존을 위해 연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국교민을 도울 것이기 때문 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는 모습이 ‘멕코연’을 통해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멕코연’이라는 단체를 통해 반영된 한국인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할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정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체성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단어 ‘Identidad’은 라틴어 ‘idem’에서 나온 말로 ‘같은 것’ 혹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이나 학술논문 등에서 위에서 인용된 동일서적의 다른 내용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라틴어 Idem에서 파생된 단어 Identidad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뜻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그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Identidad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존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처럼 전쟁 후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얀마의 군부쿠데타와 민주화 시위를 보고 있노라면 이들도 우리처럼 민주주의를 민중의 희생 위에 얻을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나라만 모진 희생과 고통을 무릅

쓰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필자가 ‘멕코연’이라는 카톨릭체방에서 운영되는 집단 행동을 보면서 우리만의 특색이라고 느끼게 된 점은 바로 ‘역동성과 균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함께 극복하는 분명한 목표 아래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조직적인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일부 회원들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코로나 이슈가 아닌 다른 방향의 토론이나 정보를 올릴 경우 이에 대한 지적을 하며 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바로잡는 자정작용도 이루어지는 조직적 집단 사고체계를 교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 한인회 운영진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 조직을 한인회 소속이 아닌 독자적 교민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는데 동의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준전시 상태이고 주변 세계 최강대국 3나라에 둘러 싸여 있으며 역내 미국과 주변 강대국의 통제와 감시가 단 한시도 멈춘 적이 없는 한반도에서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코로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 극복 중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 국민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

역시 위에서 말한 다른 나라들과 차별되는 특유의 ‘역동성’으로 코로나 난국을 교민들끼리 푼돌 뭉쳐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역동성과 균형잡힌 사고’가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고유한 성질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멕코연’ 윤영진이 의료물품과 마스크를 멕시코 전역의 어려운 한인들에게 배포하는 모습과 이를 다룬 연합뉴스 기사



대사관의 협조로 한국에서 도착한 마스크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

저자소개



조상현 멕시코한인회 부이사, 로마 살레시안 대학 (Università Pontificia Salesiana di Roma) Social communication Science 석사과정 졸업. 멕시코정부 초청장학생 자격으로 Morelos 주립대학 역사학 박사 과정 수료. 바르셀로나대학원 스페인어 교사 양성과정 졸업. 다년간 멕시코 코트라 소속 스페인어 통역 활동. 현재 프리랜서로 멕시코와 중미에서 활동 중.



LATIN AMERICA VOICES

코로나위기의 중미소국 파나마&코스타리카 - “같은 시작, 다른 끝”

이 희 종 (파나마 Rich&Noble corp. 수입유통회사 대표)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와의 힘겨운 전쟁을 펼친 지 1년이 훌쩍 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개발되어 느리지만 세계각국에서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수와 새로 생겨난 변이 바이러스로 여전히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중미의 소국인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위로는 니카라과, 아래로는 남미 콜롬비아 사이에서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는 국토면적과 인구수, GDP규모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여, 주요산업과 인종구성, 국민성향이 다름에도 자주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금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 이를 대처하는 양국의 방식과 효율성은 애석하게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는 참담하게도 금년 3월 16일 현재 파나마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가 미주대륙에서 2위, 중남미 33개국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기준일

현재 파나마의 누적 확진자 수가 35만명인데 반해 코스타리카는 21만명, 누적사망자수는 파나마가 5천9백명, 코스타리카가 2천8백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3월초 비슷한 시기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스타리카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쇄조치와 함께 강도높은 사회적거리두기, 선제적 검사를 통한 확진자 추적조치를 취해 온 반면 파나마는 첫 확진자 발생일을 전후하여 팬데믹 가능성을 감지했음에도 예정된 카니발 축제행사를 강행하였고, 첫확진자가 보고된 후에도 공항과 국경에 대한 봉쇄조치를 취하는데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정부 조치에 있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염경로 조기차단에 실패하였다.

또한 팬데믹 초기에 부족한 응급실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자재 확보를 위한 정부구매입찰에서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부패스캔들로 인해 국고낭비와 필수 의료재 확보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정부 컨트롤타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의 경우 의료와 IT인프라,정부의 효율적인 컨트롤, 불편을 무릎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하는 높은 시민의식 등으로 큰 봉쇄와 단절 없이도 비교적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었는데 반해, 중남미의 경우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가 열악한 경제와 낙후된 의료인프라환경, 낮은 시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중남미 코로나방역 모범사례로 뽑히는 엘살바도르나 코스타리카처럼 초기 즉각적인 봉쇄와 확진자 관리를 통해 조기차단 하는 방법이 인구수가 적은 나라의 경우 오히려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의 경우 정부의 뒤늦은 조치와 방역실패로 확진자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후 등락을 거듭, 3차유행으로 까지 이어지며 부득이 2회에 걸쳐 약 8개월간의 락다운(Cuarentena)조치를 실시하였지만 그럼에도 효과적으로 확진자수를 낮추는데 실패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친 경제활동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고, 특히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식당,호텔,카지노,관광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레스토랑의 경우 봉쇄기간을 거치면서 전체식당의 35%가

폐업하게 되고 호텔과 카지노의 경우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관련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의 경우에도 양국간 차이가 크다. 코스타리카가 작년 12월 23일에 멕시코, 칠레와 함께 중남미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누적 557천회 접종을 완료한 반면 파나마는 첫 백신 1만2천회분이 올해 1월20일에 도착, 현재까지 266천회분의 접종을 마쳤는데 이는 코스타리카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IMF가 예상한 양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의 경우 파나마와 코스타리카가 각각 4%와 2.6%로 예상외로 파나마의 성장률 전망치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 2월 현대건설/포스코 콘소시움이 착공한 지하철 3호선 프로젝트의 경제효과를 반영한 때문이다. 공사기간만 54개월, 총 공사비 한화 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중미 대륙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하철을 보유한 파나마가 2014년 1호선개통 이후 6년만에 3호선 노선을 착공하게 되었는데, 금번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심해진 경기 불황의 늪을 탈출하고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계획인 듯 하다.

참고로, 양국모두 교민 수는 400명대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파나마의 경우 교민구성의 70%가량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본국 대기업지상사 주재원으로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교민이 업종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겠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를 대처하는 방식과 노력은 모두가 제 각각이어서 매일 보도되는 Covid19관련 수치를 통해 그 성과와 결실을 알수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경우 비슷한 규모와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와 전략,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규칙을 따르는 시민의식에서 양국은 분명 차이가 있었다. 봉쇄기간 중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저녁회식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고 지방도시 시장이 자신의 생일파티에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한 것이 보도되어 사과를 하고, 12월말일에는 SNS를 통해 모집한 송년행사 모임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 없이 한 건물 안에 발 디딜 틈 없이 모여 파티를 하는 장면들이 보도되는 등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많은 위험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지켜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그래도 언론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캠페인으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지금의 대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상을 기대하며 위안을 삼고 있다.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은 백신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 하다. 각국이 앞다투어 백신확보와 조기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도 힘들지만 느리게 한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을 떠나 지구반대편에 있는 교민으로서 다시금 K-방역의 우수성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모쪼록 신축년에는 라틴어 어원에서 비롯된 백신의 어원인 소(스페인어로 Vaca)가 상징하듯 순조롭게 모두 접종을 마치고 내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Juntos Podemos ~

저자소개



부산외대 스페인어(90학번)과를 졸업하고 파나마 Universidad Latina de Panama에서 MBA취득함. 외환은행 여의도, 기업마케팅부, 서소문, 파나마 지점에서 근무한 바 있음. 현재는 파나마-한국간 수입, 유통업체 대표 및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활동 중



IILAS NEWS

간추린 소식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1. 제 41차 콜로키엄: “한국과 콜롬비아의 안보협력 발전방향” (2020.09.10.)



(제 41차 콜로키엄)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9월 10일 Robinson Vallejo Nestor 콜롬비아 장군을 초청하여 ‘한국과 콜롬비아의 안보협력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콜로키엄을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콜롬비아와 한국의 협력과 각국의 안보에 관한 시각 앞으로의 양국 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2.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문화동호회 및 명저읽기 모임 ‘부에나 비스타’ 정기모임 실시 2020.09.22.[12회], 2020.11.02.[13회]



(라틴문화모임 ‘부에나 비스타’ 정기모임)

중남미지역원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를 운영 중이다. 라틴 문화모임인 ‘부에나 비스타’는 부산·경남권의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달 중남미지역원 도서관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명저 읽기와 명화 감상의 시간을 가진다. 제 13회의 모임은 부산 인본과학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프로그램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3회의 모임을 가졌다.

3. 제 42차 콜로키엄: “라틴아메리카 내전과 문학의 흐름 :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 (2020.09.24.)



(제 42차 콜로키엄)

지난 9월 24일 중남미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 내전과 문학의 흐름 :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라는 주제로 콜로키엄을 진행하였다. 강사인 울산대학교 송병선 교수는 내전이 많았던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중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를 비교·소개하며 양 국가의 서로 다른 내전과 문학의 흐름을 설명하며 비슷한 부분과 차이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4. 중남미지역원 2020년도 하반기 워크숍 및 정기세미나 개최 (2020.10.22.~10.23)



(2020년 중남미지역원 정기세미나 겸 하반기 워크숍)

중남미지역원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정기세미나 및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3차년도 1/4 자체 정기세미나도 함께 겸하였으며, 3차년도 사업 계획에 관한 연구 아젠다 및 인문학 센터 활동 수립 회의와 업무분장 조정 회의를 진행하였다.

5. 제 43차 콜로키엄: “경이로운 현실과 마술적 사실주의” (2020.11.13.)



(제 43차 콜로키엄)

지난 11월 13일 중남미지역원은 제 43차 콜로키엄에서 ‘경이로운 현실과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구호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의 내용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 그를 기반으로 하여 나온 유명한 문학들을 소개하였으며 여러 문학을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시각으로 설명하며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6. KOICA 다년간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해외봉사 사진전 2020.11.16.~11.20 남산 지하철역 [1차], 2020.11.24.~11.26 부산외대 만오 오디토리움 [2차]



(KOICA 다년간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해외봉사 사진전 포스터)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11월 16일부터 “부산, 라틴아메리카를 담다”라는 주제로 중남미 지역, 해외봉사활동 사진전을 1차 (11월16~20일, 남산 지하철역) 그리고, 2차 (11월 24~26일, 부산외대 비즈니스텍센터) 개최했다.



(좌: 부산 남산 지하철 역사 내 전시된 사진, 우: 본교 비즈니스텍센터 내에 전시된 사진전)

이번 해외봉사활동 사진전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진에는 본교 학생들이 파라과이, 페루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각각 방문하며 봉사활동 하는 모습 그리고 현지인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져 있다.

7.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2021 학술대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남미의 사회 불평등과 디아스포라”
개최 (2021.01.28.)



(2021년 1월 28일에 진행된 2021년 중남미지역원 학술대회 포스터)

중남미지역원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 1월 28일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남미의 사회 불평등과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상회의(ZOOM)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시국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총 1부 2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세션에서는 브라질의 사회적 불평등과 심화 양상, 콜롬비아 토지불평등(ZIDRES법), 도미니카 공화국 내 아이티 이주자들의 불평등 양상에 대한 내용, 2세션에서는 중남미 디아스포라 국민외교, 한류 지수 개발로 본 라틴아메리카 한류 동향 및 브라질 이민 문화지형 연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8. 제 44차 콜로키엄: “스페인-중남미 관계, 현황과 전망” (2021.02.09.)



(제 44차 콜로키엄)

중남미지역원 지난 2월 9일 전홍조 스페인 대사를 초청하여 ‘스페인-중남미 관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엄을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작년 2020년에 한-스페인 수교 70주년 맞이하여 스페인과의 관계와 현재의 스페인-중남미 관계, 한국과 스페인, 중남미간의 관계와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의 내용으로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